
노동당 수도권 광역의원 공동공약 발표

-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미래를 그린다 -

노동당 인천시당+경기도당+서울시당

2014년 5월 21일, 오전 11시 00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개요:

사회: 김상철_서울시당 사무처장

발언: 기자회견 취지_경기도당 신동렬 위원장

주요공약 소개_1) 민간위탁사무 직영전환_수도권자원순환조합 설립

2) 수도권버스공사 설립_광역BRT 운행

3) '한강시민회의' 설치_물이용부담금 등 한강의제 시민주도

4) 케이블방송, 이동통신사 등 시민밀착 노동의제 공동대응

기자회견문 낭독_서울시의회 비례후보 김광이 후보자

노동당 수도권 광역의원 공동공약 발표

-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미래를 그린다 -

노동당은 인천, 경기, 서울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별 공약 외에 수도권에 함께 풀어야 되는 과제를 고민했다. 그리고 3개 광역의원 후보자들이 기존의 지역 공약 외에 수도권 공동공약을 함께 제시하고 이후 공동으로 공약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배경

인천, 경기, 서울로 구성된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된 지 오래다. 2012년 현재 수도권 통근자가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중심의 지방자치행정은 수도권의 공동 협조보다는 지역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동상이몽만을 해왔다. 이에 노동당은 수도권 3개 광역지역의 광역후보 출마자들과 함께 수도권 공동공약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서 서울, 인천, 경기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수도권 시민들의 공동비전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2. 공동공약 4가지: 3개의 지역, 1개의 약속

노동당 수도권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내놓는 공약은 전체 다섯 가지로, 그동안 갈등이 대상이었던 사항에서부터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내용까지를 망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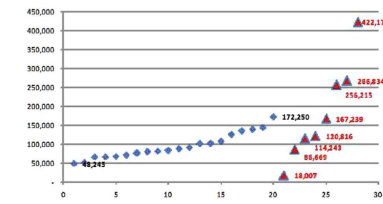
-1. 민간위탁사무 직영전환_수도권자원순환조합 설립

서울시는 그동안 필수시설이면서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총 45개의 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2010년 기준). 시설의 현황을 보면, 하나같이 화장장, 공설묘지, 납골당, 하수시설, 분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고양시와 서울시는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화장장과 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서울시의 갈등이 있어왔고, 경인고속도로를 둘러싼 갈등에 경작 서울시가 수수방관하거나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물포터널 민간자업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수도권 광역정부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노동당은 우선, 기존의 수도권매립지로 집중되는 쓰레기 행정의 통합을 제안하기로 했다. 쓰레기 행정(폐기물, 재활용, 음식쓰레기)은 현재 높은 수준의 민간위탁비용을 보이는데, 업체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상이하여 수도권 시민들이 동일한 행정서비스에도 상이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위탁방식에 따른 쓰레기 비용의 차이



[그림 3-15] 개별형산단과 일괄위탁 단위 비교(원/톤)
우측 빨간색 세로선은 일괄위탁하는 지자체의 단위, 좌측 파란색 마름모는 폐기물 종류별 개별위탁하는 것을 합산하여 계산한 단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7.] [환경부령 제542호, 2014.1.17. , 일부개정]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1. 한국환경공단
-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특히 현행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가 설립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정작 이해당사자인 서울, 인천, 경기도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시민들의 감시에도 벗어나 있었다. 수차례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공사의 출자업체에 폐기물을 매입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고 주민들이 불법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해 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노동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안하고 공동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인천, 경기, 서울지역의 쓰레기 행정에 대한 재직영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우선 폐기물 처리부분을 광역화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수도권자원순환조합’을 만들고, 배출량에 비례해 경기, 인천, 서울시가 출자한다.
- 해당 조합의 운영기구에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100명의 ‘시민이 사회’를 구성하여 수도권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통제를 강화한다.

- 2. 수도권버스공사 설립_광역BRT 운행

현재 수도권 통근자는 400만명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인천, 경기, 서울의 시도경

계를 오가는 광역통근자들이다. 하지만 최근 무상교통 논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수도권 광역통근자들의 교통문제는 특정 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3개 광역정부의 공동노력이 반듯이 필요한 문제다.

특히 막대한 건설비용을 수반하는 지하철도 건설이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인양 거론되고 GTX이나, 경전철이니 하는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이는 건설비도 건설비거나 현재에도 불어나고 있는 운영적자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림] 광역교통수단별 건설비용과 수송능력(출처: 수도권교통본부 누리집)



그런 점에서 버스를 활용한 BRT사업이 중요한 광역교통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도 수도권 BRT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신규도로건설 방식으로 많은 노선계획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남, 청라강서 등 일부에서만 사업이 진척되고 있을 뿐이다.

BTR: 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한 신대중교통수단으로서, BRT전용 통행권, 교차로 우선처리, 쾌적한 차량, 편리한 환승시설을 갖추어 운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을 제고하여 통행시간 감축 등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킨 새로운 교통수단

이에 노동당은 막대한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우려되는 기존의 GTX 경전철 방식과 신규건설형 BRT방식을 벗어나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BRT를 추진하고자 한다.

- 서울, 인천, 경기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교통본부를 강화하면서, ‘수도권버스공사’를 설립한다.
- 광역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로노선 중 버스전용노선을 마련하고 부분 BRT노선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 최종적으로 기존의 주요한 광역도로를 BRT전용도로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마련한다.

- 3. ‘한강시민회의’ 설치, 물이용부담금 등 한강의제 시민주도

한강은 강원, 충북과 함께 수도권 3개 광역을 관통하는 유일한 공동의 상수원이자 자연환경이다. 이 때문에 최근 구리시의 상수원 지역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울-경기의 갈등과 같은, 한강 갈등이 늘 있어왔다.

〈표 1-4〉 시·도별 물이용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3,856,232 (100%)	27,675	175,358	230,688	246,741	268,644	283,731	304,326	337,907	362,800	386,266	397,652	403,584	430,860
서울	1,741,212 (45.2%)	15,560	85,682	111,408	118,180	126,641	131,135	140,155	151,506	162,273	171,198	171,794	174,011	181,669
인천	463,012 (12.0%)	3,037	22,324	29,144	30,949	33,333	34,061	36,368	39,298	42,993	45,967	48,284	46,922	50,332
경기	1,568,638 (40.7%)	8,643	65,512	87,882	94,131	104,697	114,312	122,899	140,760	150,113	160,663	165,172	171,046	182,808
수공	83,370 (2.1%)	435	1,840	2,254	3,481	3,973	4,223	4,904	6,343	7,421	8,438	12,402	11,605	16,051

〈출처 : 201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한강수계관리위원회)〉

현행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상수원을 이용하는 서울과 인천 지역의 주민들이 상수원 지역의 수

질보호를 위해 내는 부담금으로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관리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는 매년 1,700억원, 인천의 경우에는 5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면서도 한강의 보전과 상수원의 유지를 위한 정책에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한강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니라 수도권인 풍수지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상징자원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생태보전의 축이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관리감독, 그리고 인천, 서울, 경기도의 부담금 갈등은 정작 수도권 시민들의 한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한강에 대한 무관심’을 키워왔다. 이에 노동당은 한강은 일시적인 행정기구의 개편으로는 장기적인 한강 비전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민주도형 한강보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 인천, 서울의 광역의회가 주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외의 한강시민회의 구성을 위한 ‘한강시민회의 조례’ 공동제정
- 중장기적으로 기존 한강수계기금 및 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이양 추진
- 시민주도형 한강보존비전을 마련하고, 매년 한강에 대한 시민포럼을 개최하면서 계획의 이행과정을 평가

ㄴ 4. 케이블방송 등 시민밀착 노동의제 공동대응

노동당은 지속적으로 기존의 공장 등 사업장 중심의 노동에서 벗어난 생활권 내 지역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세상에 알려진 케이블방송 기사들의 처우는 놀랍다. A/S에 대한 비용을 시청자에게 미리 청구하여 걷어들이고 있으면서도 매우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등 미처 몰랐던 우리 주변의 노동환경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의 노동당 광역의원들은 각 지역 내 생활권 지역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 기존 비정규직노동센터의 권한 강화(상담 업무에서 조사 및 제도제안 권한까지)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만들기 공동 사업 추진(노동친화도시조례(안) 제정)

3. 노동당의 과제

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수도권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원내에서 원외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행정을 넘어서는 공동의 정치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노동당 수도권 광역의회 후보자 공동 공약발표 -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어떤 무능보다도 정치의 무능이 노동자 서민들의 삶에 가장 큰 해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 정치가 법제도의 한계니 혹은 행정권한의 제한이니 하는 행정의 선긋기에 중독이 된다면 그 사회는 정치의 실종이라고 할 만하다. 정치는 언제나 현재에 다리를 두고 미래를 지향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치 역시 침몰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노동당은 경기, 인천, 서울지역 당원들, 후보자들과 함께 정치의 무능을 돌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노동당은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각 지역 당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리고 그것들이 각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행정의 구역을 벗어나 수도권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대한 ‘수도권 공동공약’을 발표한다.

알다시피 수도권의 통근자는 매일 400만명에 이르고 이런 시민들에게 시나 도의 경계는 무의하다.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행정구역은 그야말로 행정의 것이지 시민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한강과 같은 자연환경은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생태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것은 상수원이 위치한 경기도나 혹은 한강물을 마시는 서울시민, 인천시민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당이 제시하는 공동공약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 문제다. 이미 노동당은 기업형 민간위탁에 대해 전면 직영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직무만 직영으로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소민간위탁 부분이 그렇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집결되는 3개 지역의 쓰레기를 인천, 서울, 경기도가 출자하여 만든 조합을 통해 관리운영하자는 것이 노동당의 제안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행정의 직영화에 따른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도권 버스공사를 설립하고 수도권 통근자를 위한 공영 광역BRT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BRT는 신규 도로건설을 수

반하고 있어 사업진행이 늦고, 무엇보다 자가용 수요를 줄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당은 기존의 광역 도로망을 BRT노선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자가용 이용 수요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RT 도입도 더욱 용이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규 노선을 수도권버스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면 대중교통의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강을 젖줄로 살아가는 수도권 시민들이 주도하는 한강관리모델로 ‘한강시민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미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서 기존의 한강관리가 얼마나 세 개 지역의 시민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경험했다. 노동당은 행정이 추가되는 기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방식으로 는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실 수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시민들이 주도하고 합의하면서 한강의 장기적인 미래 모습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등 생활권인 지역을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주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의 비정규직노동센터의 기능에 상담업무 외에 조사 및 제도제안의 권한까지 부여하여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권 주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동친화도시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여, 노동자인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노동당의 인천, 경기, 서울지역 당원들과 광역의회 후보자들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4가지 공약을 내놓는다. 이 약속은 이번 지방선거 한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가장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당의 활동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언론사 및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노동당의 작지만 소중한 활동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2014년 5월 21일

노동당 인천시당, 경기도당, 서울시당 당원 및 광역의회 출마자 일동

「끝」